

# 50주년인데... 좋아할 수만 없는 대불련

## 기념 사업회 발기인대회, 동문 네트워크 구축 추진

2013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7월 14일 오후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0주년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최경환, 이하 대불련)은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 50주년 기념사업회 주요사업들 '사은과 감사'의 자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50년 동안 대불련이 걸어온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으로 보는 대불련50년사 발간 △대불련에 힘이 된 동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등을 추진한다. 대불련 발전을 위한 추진위원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기념사업회 조직구성을 통해 후원금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또, 여름캠프 등을 통해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년간의 갈등을 허물겠다는 게 대불련의 계획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대불련 50주년 행사를

위해서는 신도 단체 재등록을 놓고 벌어진 포교원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게 급선무다. 대불련은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역량 집중으로 현안을 풀어내려 하고 있다.

최경환 대불련 회장은 발기인 대회 인사

### "술 동문 축제의 장" 다짐

### 조계종 단체 등록 갈등 속세

### 회장 "적법한 절차면 등록"

말에서 "이번 기념사업회는 대불련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 재학생들을 위한 후원회 조직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후원의 틀을 모색할 것"이라며 "기념사업회가 원만히 회향되면 포교원과의 갈등으로 벗어난 대불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6일에는 자성교쇄신결사추진본부

장 도법 스님을 비공개 예방하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대불련의 역사성과 특수성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 추진경과보고 △신도단체 재등록사업 이후 대불련의 현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요구조건 등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불련이 신도 단체 재등록 거부 사유는 단순히 조계종 명칭 사용 강요에 국한되지 않는다. 포교원장이 당연직 총재가 되고, 포교원장이 회장과 감사의 임명권자로 나설 것을 포교원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종단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는 게 포교원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학생 불자들의 다양성이 존중돼 온 연합 모임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불련이 신도 단체 재등록을 무조건 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궁극적으로 포교신도단체로 등록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며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모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자 포교원은 대불련과의 선긋기에 들어갔다. 대학 동아리 중심의 포교가 아닌 사찰, 지역 중심의 대학생 포교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7월 18일 통합종단 50주년 2차 세미나에서 포교부장 송묵 스님의 발제문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송묵 스님은 "청년과 대학생 포교 전략의 재설정이 불가피한 상태"라며 "올해 종단 차원의 청년·대학생 포교 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고, 3,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청년·대학생 포교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행선을 그리고 갈등 구조에 점점 좁혀져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두 단체 모두 자신들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윤재철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학생들은 기존절서를 초월해 자유로운 사상을 지녀야 한다"며 "종단이 좀 더 마음을 열고 포용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94@hyunbul.com

## 이번에는 댕가성 교회 헌금 의혹?

### 현병철 국가위원장, 親MB 교회에 거액 헌금

연임에 도전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이 친MB계열 교회에 거액의 헌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거액 헌금이 국가위원장 임명 1년 전부터 집중돼 댕가성 여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통합당 국회의원은 7월 13일 현 국가인권위원장의 기부금 내역서와 한양대 법학과 교수 시절 강의 내역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위원장은 친MB 계열 김삼환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강동 명성교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명성교회에 매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씩 4년 동안 무려 5,5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헌금을 기부해 왔다. 이는 같은 기간 현 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한 총액 377,000원의 약 14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7년 현 위원장이 교회를 포함해 각종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112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거액 헌금 기부의 시점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07년까지 연간 1백만 원 정도였던 현 위원장의 교회 기부금이 갑자기 1000만원대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로비성 고액 헌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담임목사는 17대 대선 전후로 이명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



위원장 임명 1년 전부터 급증 3년간 年평균 1000만원 헌금

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예배를 집전하는 등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친MB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한편 현 위원장은 한양대 법대 교수 시절 한 차례의 강의 없이 역대 연봉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한양대 법대 교수와 한양사이버대 학장을 겸직하면서 2년간 단 한 차례의 강의도 없이 양쪽에서 각각 1억원 대와 2천만원대의 연봉을 동시에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소망교회 거액 로비성 헌금 의혹을 샀던 유영숙 환경부장관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현병철은 더 이상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인사 청문회 이전에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 이런 인사가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MB정부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신종일 기자

## "10.27법난 피해자들을 악용 말라"

### 법난 피해자회, 17일 기자회견... 영담스님 사퇴 촉구

10.27법난 피해자 스님과 재가자들이 현재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정상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피해자 스님들은 현 위원장 영담 스님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10.27법난 피해자결성회(회장 금룡, 이하 법난 피해자회)는 7월 17일 심의위원회



10.27 법난 피해자 결성회는 7월 17일 심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교육기념관 건립 반대 "보상이 아닌 배상" 강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회의 상황을 성토했다.

법난 피해자회는 회견문을 통해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2008년 3월에 제정돼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은 안중에도 없다. 매년 연 10억 원의 국가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며 "여지껏 의료지원금은 3억여 원을 편정하고, 위원장의 욕심으로 위원회는 장기간 파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원장은 매월 13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난 피해자회는 △10.27법난피해

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정상화 △영담 스님의 위원장 사퇴하고 신임 총무부장에 인수 인계 △피해자 의견이 배제된 10.27법난 교육기념관 건립 반대 등을 주장했다.

법난 피해자회는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스님들의 그간의 성토도 이어졌다. 법난 피해자회장 금룡 스님은 "처음부터 보상이 아닌 배상의 책임을 국가에 물어야 했다"며 "하지만 그나마의 보상도 안 이뤄지고 있다. 치료비 및 폰 심의해 줘어준 게

고작"이라고 성토했다.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위원장 영담 스님이 민간 위촉직 위원들을 일괄 해촉하고 신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민간 위원들은 위원장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위원장의 해임까지 요구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올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난 피해자회는 자신들의 입장을 총무원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KT 올레 공식 사과공문 전달

### 해당 홈페이지도 폐쇄

㈜KT가 올레사이트(www.olleh.com)의 특정 종교 이미지 사용에 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해용스님, 이하 종평위)에 공식 사과공문을 보내고 해당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게재했다.

㈜KT는 공문을 통해 "서비스 개편 시 실수로 귀 종교에 다른 특정종교 이미지가 잘못 연결 되어 사건이 발생했다. 어떠한 종교편향이나 편파의 의도와 고의성은 없었다"라며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해 귀 종단 및 관련된 모든 분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응수를 구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의 '타운서비스'에 팝업과 게시판을 통해 19일 오후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종평위는 지난 6월 29일 ㈜KT에서 운영하는 올레사이트에서 특정종교 이미지를 사용에 대해 경위 해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해당 기업에 발송했다. 이에 지난 7월 10일 고경곤 ㈜KT 인터넷추진본부 본부장, 김종철 팀장이 방문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남한산성 장경사 47년만에 보존지 회복

### 수원지법 성남지원, 장경사 시효 취득 인정

국가 부지 내 사찰 종교 용지에 대한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찰 종교용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7월 11일 조계종 장경사(주지 경우)가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경사가 1965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점유 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

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채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장경사는 1965년 대웅전이 위치한 토지들을 매수하고 현대, 9층 석탑, 대웅전 등 건립해 지역 사찰로서의 역할을 여실히 해왔다. 하지만 1988년 필지가 국유로 보존등기가 됐지만, 국가에서는 사찰 점유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갑자기 1억 원이 넘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장경사 측은 "국유재산인 종교용지에 대한 점유취득을 인정한 첫 판례"라며 "향후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확보하도록 해 민족문화유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신종일 기자

© photograph by inja

# 5일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 찾기

## 보녕사 여성 단기출가

아름답고 청정한 절

**참가대상**  
모든 여성 / 20명

**참가비**  
일반인 20만원  
학생 10만원

**일정** 4박 5일  
7월 27일 (금) 부터  
7월 31일 (화) 까지

**프로그램**  
팔관재계 수계, 예불, 발우공양, 다도, 명상, 사찰음식·문화·교리 강의

**문의 및 안내**  
보녕사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m.bongnyeongsa.org

템플스테이 실무를 함께 할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